

보도시점 2024. 7. 11.(목) 15:00
(국제엠바고)

배포 2024. 7. 11.(목) 1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한국경제 성장 재개, 하반기부터 내수 개선
‘24년 성장률 2.6%(유지), 물가 2.5%(△0.1%p 하향) 전망
- 중소기업 생산성 등 구조개혁 관련 「역동경제 로드맵」과 인식 공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11(목) 현지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Domestic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4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권고	「역동경제 로드맵」 해당 부분	
숙련 외국인력 비자 규제 완화	혁신생태계 강화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공정한 기회 보장	정당한 보상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주거 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회이동성 개선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 보고서 원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http://oecd.org>) 참고, 원문 내용과 상이할 경우 원문 우선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김귀범 (044-215-2730) 박철희 (044-215-2732) 성지현 (044-215-2735)
-------	-------------	------------	-------------------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평가

- (동향·전망) 한국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
 - ① 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 강화,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
 - ②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제약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 전망
 - ③ 고용시장은 견조,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로 시장 안정화됨
- (리스크)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 등
- (구조개혁)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 필요
 - *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지출압력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출산 장려·노동인구 확보 등을 통한 고령화 대비 등
- 상기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시,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p, '60년까지 +42.1%p로 예상

<첨부> 북한 경제 (OECD는 매년 리스크 요인으로 북한경제를 포함)

-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당시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한 결과, '20~'22년 3년간 역성장* → 남·북간 1인당 GNI 격차 대폭 확대**
 - * GDP 성장률: ('20) △4.5%, ('21) △0.1% ('22) △0.2%, ** ('16)22배 → ('22)30배
- 北 무력도발시 우리 주가가 단기 변동 후 회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무력도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
- 만일 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출*로 우리 경제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
 - * 동·서독 통일시 서독은 동독의 인프라 투자 등에 GDP의 4.5% 수준('91~'99)을 투입
- 북한의 출산율 하락 추세 등 고려시, 북한인력이 유입되더라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 불분명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증대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개혁 필요
 -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Red light)와 동시에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Green light) 권고
 - * "Limit the scope for aid to companies in any form except in explicitly allowed cases... 'Green light' regulatory regime in which activities are generally allowed except if explicitly prohibited."
- (Red light)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야기 →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 + 지원정책 통합관리 강화**
 - * 시장실패 보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지원
 - **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상한 설정 + 제한적으로 활용중인 '졸업제도' 적용 확대
- (Green light)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반경쟁적 규제 철폐
 -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외국인 진입장벽(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등) 제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 등

3 탄소 감축

-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효과적 노력 필요
 - ①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
 - ② 저탄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기업·가정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
 - ③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전환에 따른 경제주체의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4 인구감소 대응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 확대 추진

* "Supporting people to have the number of children they desire ..., while lengthening working lives and welcoming more foreign workers would counteract the adverse effects of ageing."

- (출산율)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 가능하도록 '일-생활 균형' 개선

-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
-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장려

② 출산·육아비용(주거·교육 등)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정규·방과후) 질 제고 등을 통해 가족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 완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기회 확대

- (노동인구)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①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 기간 연장

② 고숙련 외국인력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요건 완화

① 인플레이션 및 재정 문제 대응(Responding to inflation and fiscal challenges)

-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검토를 수행할 것
- 현 기조대로 '24~'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할 것
-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24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음

② 中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Levelling the playing field to boost SME productivity)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을 할 것
- 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수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③ 기후 목표 달성(Achieving climate targets)

- 2030 NDC를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할 것
-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 공급 및 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할 것
- 탄소 관련 수입을 녹색분야 지출에 활용하고,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것

④ 인구감소 대응(Responding to populaton decline)

-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보육 질 제고, 보육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것
-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할 것
-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인상하고, 대체율이 더 높은 단기 휴직제도를 신설할 것
- 재정지원을 통해 육아휴직 시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
-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할 것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할 것
- 연공급제에서 벗어나 직무특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할 것. 같은 맥락에서 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할 수 있음
- 상향조정이 계획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상향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
-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
- 임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서 숙련 근로자로의 비자 전환 요건을 간소화할 것

※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oecd.org>)를 참고하기 바라며,
한글 보도자료와 원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문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